

작년 승강기 고장,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국내 승강기 75만대 설치 '역대 최대'

고장 1만7450건, 고장률 2%대로 올라

고장 늘자 사고 덩달아 ↑ ... 7년來 최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승강기 고장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만7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고장에 사고도 7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31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는 총 74만9845대로 역대 가장 많다.

엘리베이터가 70만1130대로 전체의 93.5%를 차지한다.

에스캐레이터 3만922대(4.1%), 덤웨이어 7604대(1.0%), 무빙워크 5906대(0.8%), 휠체어리프트 4283대(0.6%)다.

지난해 각종 승강기에서 빚어진 고장 건수는 총 1만7450건이었다.

승강기 고장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많다. 승강기 설치 대수가 당시 47만1403대보다 1.6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도 눈에 띄게 잦은 셈이다.

승강기 고장은 매년 2000~3000건 안팎으로 발생해오다 점차 감소해

2017년 710건까지 줄었지만 2018년 2134건, 2019년 8256건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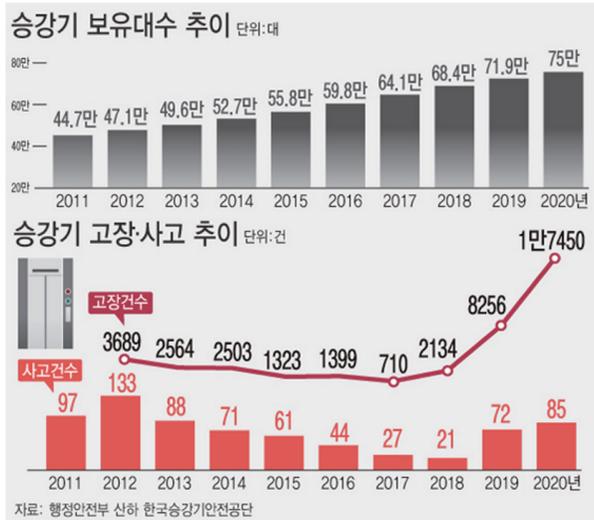
고장 건수를 설치 대수로 나눈 비율인 고장률은 2.33%가 된다. 승강기 100대 중 2대꼴로 고장이 났다는 의미다.

승강기 고장률은 2012년 0.78%를 기록하고선 매년 조금씩 개선돼왔다. 2013년 0.52%, 2014년 0.48%, 2015년 0.24%, 2016년 0.23%에서 2017년 0.11%까지 떨어졌다.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수리한다 승강기 및 부품의 질이 좋아지고 이용·관리자의 안전 인식 개선이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2018년 0.31%로 높아지고선 2019년 1.15%에 이어 2%를 넘겼다.

작은 고장에 인명 피해 사고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사고 건수는 85건으로 2013년(88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사고 건수를 설치 대수로 나눈 사고발생률은 0.011%였다.

85건의 사고로 인한 89명(사망 10명·부상 7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89명 중 71명(79.8%)이 이용자였고 승강기 기술자 13명(14.6%), 건물 관리자 5명(5.6%)이었다.

승강기 통계상의 사고는 사망, 1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중대사고'로 분류하는 것만 계산한다. 부상 정도가 경미한 인원까지 합하면 인명 피해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다.

승강기 사고는 2012년(133건) 100건을 웃돌다가 2013년 88건으로 줄어든 뒤 2018년까지 6년 내리 감소세를

보여오다 2019년(72건)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발생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38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작업자 과실 12건(14.11%), 유지관리업체 과실 8건(9.4%), 관리주체 과실 7건(8.2%), 제조업체 과실 1건(1.2%) 순이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기타는 19건(22.4%)이다.

기동취재본부

'건전한 성관념 왜곡' 음란물 2000여개 배포 60대 집유

법원이 음란 동영상 수천 개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통)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4월 23일 사이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한 웹하드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음란 동영상 2348개를 배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클럽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A씨는 '매일 정액권이 무료 충전돼 제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했다. 해당 계정으로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나눠 갖자'는 운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무시' 영업 강행 PC방 업주·손님들 벌금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PC방 업주와 손님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5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60대 손님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PC방에서 손님 4명을 출입시켜 계입을 하게 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모든 PC방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는 PC방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영업 규모를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PC방을 방문한 손님들도 죄질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지도사 시켜 검안서 거짓 작성 50대 한의사 실형

숨진 사람의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안서를 허위 작성, 부당 이익을 쟁긴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몰수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경기 지역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A씨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동료 한의사 B씨, 장례지도사 C씨와 공모해 한의사 명의와 한방병원 직인을 이용, 허위 시체검안서 1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실제 숨진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안하지 않고 C씨를 시켜 사망 원인만에 '알코올성 중독증 추정' 등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서로 나눠 가졌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한의사 명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C씨 등에게 제작하라고 지시했고, C씨가 숨진 사람의 검안서를 작성할 때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C씨가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검안했다고 거짓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C씨도 다른 지법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마약·역주행 사고로 아빠 잃어"...엄벌 요청 청원

국민청원에 '엄벌 요청' 청원...5000명 동참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의해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엄벌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월30일 국민청원에 따르면 1월29일 '음주·마약·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정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5500여명이 이상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음주운전 역주행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있었던 이 사고로, 60대의 택시운전사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아반떼 운전자 A(32)씨와 동승자 B(32)씨는 허리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전날 눈

도 오고 해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조금이나마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면서 "그런 사람의 인생과, 저희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교통사고 직후 해당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이후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월29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